

IT ODA,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가?*

-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도전 -

송 호 진**

요약 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 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 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주제어: 정보화 공적개발원조, 낙관적 기술결정론, 비판적 도구론, 사회구성주의, 민주화 가설

Does IT ODA Promote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

A challenge to optimistic technological determinism

Hyojin Song

Abstract This research has a purpose to verify whether the Internet diffusion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an bring about democratic changes i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at IT ODA has 'positive(+)' effect on the Internet diffusion in recipient countries. It seems to support the expectation of donor countries that they can lea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by constructing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the use of the Internet. However, as the impact of IT ODA on the Internet diffusion is not considerable as well as the Internet diffusion has no strong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lso each of these aspects of countries looks different, it is hard to see that the democratization hypothesis based on the optimistic technological determinism is reasonable.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IT ODA must be based on not blind optimism that IT transfer will lead to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ut the social structuralism which is based on distinctiveness and uniqueness of countries, and suggests that the discuss of the effect of IT ODA proceed with the constructive way.

Keywords: IT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ptimistic technological determinism, critical instrumentalism, social structuralism, democratization hypothesis)

2014년 9월 4일 접수, 2014년 9월 15일 심사, 2014년 11월 1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006)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hyojinsg@naver.com)

I. 서론

낙후된 기술과 취약한 자본으로 인해 저발전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기술 발전에 기초한 ‘도약 발전(Leapfrogging Development)’을 꿈꾸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NGO 등은 정보시대의 도래 이후 발생한 국가 간 정보격차가 기존에 존재하였던 개발격차를 가중시킴으로써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IT이전’에 집중하고 있다(고경민, 2009a: 126). 가장 대표적인 예가 ODA를 통한 IT지원 사업으로 DAC 회원국들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IT ODA지원은 IT ODA지원은 2005년에는 264,543백만 불이었으나 2012년에는 이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한 2,917,268백만 불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ODA에서 정보화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36%이었으나 2012년에는 2.69%로 높아졌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IT ODA 확대는 수위국의 경제적 성장 못지않게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arris, 2004; 이희진 외, 2007). Gompert(1999)나 Kedzie(1997) 등에 따르면 IT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와 공산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 붕괴된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IT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선진국에서는 권위주의적 특성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IT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면 이들 국가의 체제가 흔들리고 독재자 또는 엘리트들이 정치적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시민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가져와 풍요롭고 민주적인 미래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가정하였다(Shultz, 1985; Kedzie, 1997; Gompert, 1999; Friedman, 2000; 이희진 외, 2004: 189).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가 경제적 성장을 위해 인터넷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통제를 철폐하고 민주적 전

환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강력한 통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인터넷 확산을 포기하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정보기술의 정치적 영향에 관한 ‘민주화가설(Democratization Hypothesis)’로 불리기도 하는데(고경민, 2012: 26), 미국이 대표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세계적 전파를 위한 효과적 추진 전략으로 정보화에 주목하였다(고경민, 2012: 32).¹⁾

그렇다면 IT ODA에 대해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IT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터넷이 발전하고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가 가능해져 개발격차가 해소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의 실제적 상황에서 ODA를 통한 IT의 이전은 ‘발전’이라는 목표에 근접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은행이 주도한 멕시코 농촌지역의 MCTs (Multipurpose Community Telecenters)사업과 인도의 Gyandoot 프로젝트는 기대와 달리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MCTs사업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처음 구축된 23개의 텔레센터 가운데 2년 뒤에도 운영되었던 것은 고작 5개로 80%의 실패율을 보였다(Wade, 2002; UNDP, 2001; 고경민, 2009a: 132). Gyandoot 프로젝트는 인도의 다르(Dhar) 지역에서 벌인 인터넷 구축 사업으로 정보격차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거버넌스 수준을 높여주고자 추진되었으나 사업 종료 2년 뒤 상당수의 키오스크가 버려지거나 폐쇄되고, 고작 2-3일에 한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쳤다(Heeks, 2005: 11).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비민주적이며 권위적인 체제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민주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되지 못한 것 같다(고경민, 2009a: 128-129). Kalathil, et al.(2003)은 중동 및 아시아의

1) 미국의 쿠바에 대한 통신지원 및 관련 NGO의 교류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미 국무성과 국제개발처(USAID)의 민주주의 지원사업 차원에서도 추진되었다(고경민, 2012: 32).

권위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이들 국가가 IT를 차단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면서 선진국의 낙관적 기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비정부기구나 원조전문가들은 경제적 실익이나 정치적 동기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경제적 발전정도나 정치적 변화에 대한 평가에 우려를 보인다. 그러나 금전상의 지원 규모나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IT이전이 국가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증은 공여국의 국민들의 원조 피로도(aid fatigue)를 최소화하며, 원조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효과검증 작업은 '죽은 원조(dead aid)'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도 당위적 필요성을 갖는다(송효진, 2014: 93).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ODA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지 않으며, 관심 또한 부족해 보인다. IT ODA를 다루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단일 사업의 성공도(효율성)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나(예: 박재신 외, 2013; 정충식, 2014 등), 경제적 효과에 집중할 뿐(예: 김수진 외, 2012; 윤종선, 2013; 김홍주, 2013 등) ODA를 통한 기술이전이 수원국의 인터넷 확산을 이끌고, 촉매가 되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체제의 붕괴(또는 변화)를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확산을 추구하며 IT ODA에 대한 수요가 높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민주화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민주화가설(Democratization Hypothesis)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낙관적 기술결정론자들의 주장처럼 선진국과 상이한 특성을 가진 개발도상국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작업

은 단순한 비판적 검증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T ODA사업의 효과성과 근본적인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는 인터넷과 발전, ODA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확장적 논의를 이끌기 위함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논의

1. 공적개발원조(ODA)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보기술(IT)의 이전

OD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개발격차가 다양한 경제적·사회정치적 요인들에서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선진국들이 국가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업이다(이천우, 2011). 2000년 UN총회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빈곤타파 및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선언하였다. 이는 1996년 OECD/DAC가 작성한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인 “Shaping the 21st Century”에 기반을 두어 작성된 빈곤근절을 위한 범세계적 목표로서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되어 있다.

ODA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관점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 원조의 목적 중 하나라는 데서 출발한다.²⁾ 그리고 원조와 민주주의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가난하고 전형적인 독재국가에 집중되었던 해외 원조 중 민주화와 관련된 원조 프로그램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Kalyvitis, et al., 2012: 2-4). 민주주의에 대한 원조의 효과는 이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한 연구들로부터 분명한 결론을 얻어낼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어 왔다.

Goldsmith(2001)는 1975년부터 1997년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하라이남 지역에 있는 48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ODA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함³⁾을 찾았고, Dunning(2004)은 민주주의에 대한 원조의 효과가 미약하고 냉전 이후의 제한된 시기에서만 나타났지만 양자 간에 분명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Finkel, et al.(2007)의 경우에는 USAID로부터 원조 받은 수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원조가 민주화를 신장시켰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조가 민주주의에 대해 반대의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 Djankov, et al.(2006)은 원조가 민주주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조가 지대추구 행위를 강화하도록 정치인들을 유도하고, 정치 제도로 하여금 덜 민주적 또는 덜 대표적이도록 손상을 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국의 원조를 통해 민주주의를 건설하려는 공여국들의 노력은 선거 절차를 개선하거나 인적 자원의 질적 제고,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Kalyvitis, et al.(2012)은 원조가 수원국의 민주화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원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기보다 각각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원조가 수원국의 민주화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경우

는 ‘선거나 기술적 원조(Technical Aid)’ 즉, 정치적 목적을 가진 원조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라고 하였다. Brautigam, et al.(2004)도 과잉된 원조는 개혁 시도들을 방해하여 민주화를 저지하고, 공여국과 수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낳거나 ‘공유지의 비극’을 영구화시키며, 시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에 대한 의존보다 원조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책무성에 대한 요구나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원조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민주적 전환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비효율성이나 부패의 계기를 제공하고, 굶겨버너스를 약화시켜 독재정권의 힘만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조와 민주주의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예: Crawford, 1997; Knack, 2004).⁴⁾ 이에 Easterly(2003)는 원조의 민주적 효과는 공여국에 따라서 또는 수원국의 국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⁵⁾

그렇다면 정보화 분야의 ODA는 어떠한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IT가 새로운 민주적 질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조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는 데 대한 광범위한 가정이 형성되었다. IT와 관련한 초기 많은 연구들에서는 ‘IT발전은 곧 경제성장’이라는 양자의 등식화를 가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IT가 개발도상국의 저급한 기술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의 통상적인 발전 경로나 속도,

2) ODA의 주된 목적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에 있지만, 사실 공여국의 지원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긴급구호에 조력하기 위해,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와 같은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여국의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공여국의 국익과 전략적 이익을 이루기 위해, 공여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이다(Riddell, 2007). 즉, 한 국가가 처한 입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크게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인도주의 동기, 상호의존 동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복희, 2002). 그러나 실제 행해지는 ODA는 대부분 어느 한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동기가 혼재되어 나타났으며(유장희, 2005),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전통적 동기 외에 세계화로 인해 지구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동기로 부상되었다. 특히, 밀레니엄 선언 이후, 개도국의 빈곤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부에 국한되는 일국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규정되면서 ODA의 목표도 선·후진국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인간안보나 인권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개정통 외, 2012: 84-86).

3) Goldsmith(2001)는 원조가 시민의 자유, 정치적 경쟁, 참여 등을 이끌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4) Crawford(1997)는 1990-1996년의 29개의 사례에 대한 계량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원조가 수원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검증해내지 못하였다. Knack(2004) 역시 1975-2000년의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원조와 민주주의간 유의한 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Kangoye(2011: 15)는 원조가 경제적 불안정성(교역의 불안정성 등)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효과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런 시각에서 원조가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입장의 연구는 Chauvet, et al.(2004, 2007), Collier, et al.(2001, 2007) 등이 있다.

6) ‘정보기술 도약담론’은 개발도상국의 IT이용과 개발을 강조하는 다양한 정책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IMF 국제기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민간 기업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IT를 개발도상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기술로 간주하고(Norris, 2001: 6), 신화처럼 여기는 근거가 되었다(고경민, 2009: 129).

성장단계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정보기술 도약 담론’⁶⁾을 소개하기도 하였다(Singh, 1999: 203-214; 고경민, 2009: 127). IT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주장은 IT가 확산되던 시기에 많은 공산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들이 붕괴됨에 따라 더욱 강해졌는데,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권위주의 체제나 폐쇄 체제를 가진 개발도상국에 정보화분야의 원조를 늘림으로써 외부 세계와의 채널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리터러시와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반체제 세력을 등장하게 하여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동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Kedzie(1997)는 이를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라 하였고, IT ODA를 통한 ‘신근대화론(New Modernization Perspective)’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⁷⁾

2. IT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논쟁의 주요 흐름

IT ODA의 성과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수원국의 필요와 요구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멕시코의 MCTs사업이나 인도의 Gyandoot프로젝트 사례처럼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IT OD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는 이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IT ODA의 성과에 관심을 갖고 이를 다룬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ODA를 통한 IT이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며 계량적 검증은 시도하는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⁸⁾ 이러한 연구의 부족과 편중된 경향은 두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하나는 개발을 위한 IT에 대한 관심이 관련 산업의 성장세나 신경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증대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 비해 중요성이 간과되

었다는 것이며(김수진 외, 2012: 190), 다른 하나는 IT와 발전의 관계에 대해 만연된 것처럼 보이는 낙관적 기술결정론이다(고경민, 2009a: 133-135).

IT의 확산과 민주주의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의 대립 구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에는 도구주의적 관점이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최고은, 2010: 36). 각각에서 IT확산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결정론

기술결정론은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요인 중에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기술이 그 자체의 고유한 발전 논리, 즉 공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발전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고 가정하고 있다(홍성욱 외, 2006: 75). Winner(1986: 275)에 따르면 기술결정론은 두 가지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 사회의 기술적 기반은 사회적 존재의 모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조건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상의 변화는 사회에 있어 단일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기술의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최고은, 2010: 40). 즉 기술결정론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또는 사회구조가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며,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사회의 특수한 맥락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동일한 형태로 기술을 수렴하게 된다고 믿는다.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기술결정론의 시각은 낙관적 입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낙관적 기술결정론에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이 사회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정치적 발전을 촉진하여

7) 근대화 이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경제성장, 민주주의를 위해 서구적인 모델의 적용이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암묵적으로 그들의 발전 모델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이행경로를 보여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신근대화론은 1950-60년대의 근대화 이론의 논리와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이가 있다면 정보기술을 새로운 매개로 한다는 것이다(고경민, 2009a: 146).

8) 고경민(2007, 2009a, 2009b, 2012), 고경민 외(2010), 이회진 외(2007) 등의 연구에서는 IT이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몇몇 특정 국가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로 한계를 가진다.

직접 또는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Toffler(1995)는 정보사회에서는 다수결에 기반을 둔 대중민주주의가 아닌 소수세력의 다양성에 의한 '모자이크 민주주의'가 등장하며, 대의민주주의 대신 국민 스스로 대표자가 되고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반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가 등장한다고 하였다. Naisbitt(1982) 역시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과거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정치체제하에서 불가능했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발달이 지금까지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전 사회와 다른 양상을 가진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는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나 전체주의적 가능성(Ronfeldt, 1992: 6)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사회결정론

아시아나 중동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터넷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조직 차원에서 이의 이용확산을 위해 능동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해 접근과 콘텐츠 유통을 제한하는 공식적 방법과 관행 등에 따른 비공식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6). 인터넷이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가 국가의 통제에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 체제를 보이는 국가에서 인터넷은 개인적 편의수단을 넘기 어렵고 시민사회 역시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중국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IT의 이용 수준이 높고 경제적

발전을 거두었지만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여전히 확고한 권위주의적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경민, 2009b: 169; 2012: 40). 이는 기술의 발달이 사회변동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기술 자체로 사회적 관계나 제도를 변할 시킬 수 없다는 사회결정론의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회결정론은 사회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술발전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술의 발달과 이용에 개입한다고 보고 있다(강정인, 1999: 168).

3) 도구주의

도구론은 기술이란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가치중립성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관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Bell(1987: 31)은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에서 기술이 사회변화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기술은 수단과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라고 하였다(박홍수 외, 1995).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이란 중립적인 도구인 기술을 자유민주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7-18), 기술은 '사회가 사용하기 원하는 대로' 고도의 권력집중화를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다원성·다양성 등으로 거대한 탈집중화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강정인, 1999: 165).

도구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IT가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는 낙관적 기술결정론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강정인, 1999: 166). 그러나 IT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 활성화나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7-18).

4) 사회구성론

Castells(2000)은 국가나 조직들이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또는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기술을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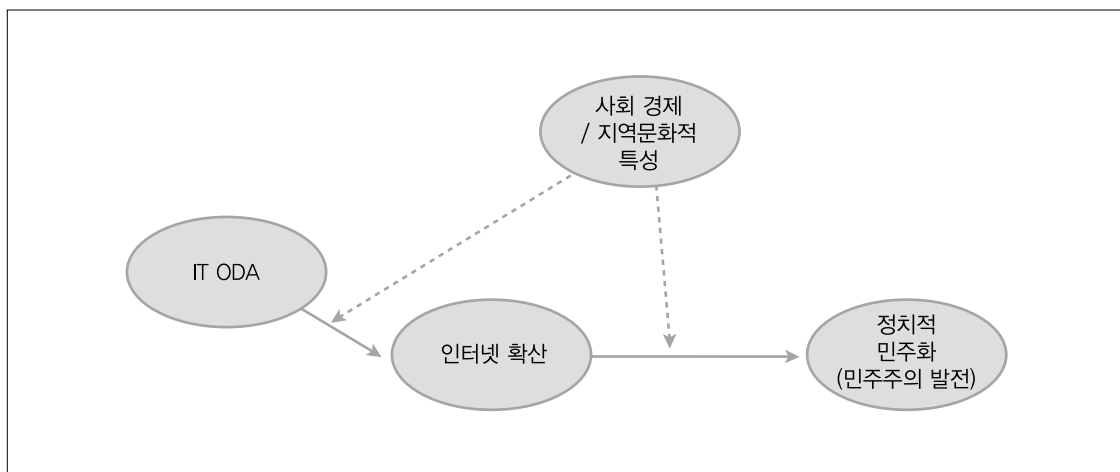
로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이 국가마다 다른 역사적 변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IT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시각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Kalathil, et al.(2003) 또한 아시아,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국가적 맥락에서 시민사회, 정치와 국가, 경제, 그리고 국제적 영역 등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통제의 국가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의 확산과 민주주의에 관해 선형적 인과관계(Linear Causality)를 주장하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이 체제나 국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균일하게 민주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기술결정론’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력은 어느 한 관점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행위주체들이 어떻게, 어떤 종류의 담론을 구성해 내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형태로 그 담론이 행위주체들을 구속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기술결정론이 보다 설명력을 얻을 수도 있고, 사회결정론이 설명력을 얻을 수도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9). 즉, 인터넷과 민주주의 발전 관계는 행위주체들이 속해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따라 다르며 동시에 행위주체들이 그 구조를 어떻게 ‘구성’ 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기술결정론이나 사회결정론을 배제하기보다 이들 관점에 의해 인터넷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자리매김 되며 실천적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IT ODA를 통한 인터넷 확산이 수원국에 유의한 정치적 영향을 가지는지, 그것이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조건과 상관없이 획일적이고 균질적으로 민주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민주화가설’과 이의 전제가 되고 있는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증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를 통한 IT이전이 수원국의 인터넷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둘째, IT ODA 수원국에서 인터넷의 확산은 정치적 민주화에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하는가? 셋째, IT ODA의 효과,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관계는 수원국의 상이한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이며 균질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실증 분석에 앞서 연구목적에 따른 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국가의 민주적 발전 요인에 대한 검토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정은 여러 요인들이 다차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인구나 지정학적 위치와 같은 자연적 요인, 경제구조나 경제자유화정도, 문맹률, 부패문제, 종교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원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이들을 포함한다.

2. 변수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연구의 주요 변수는 IT ODA와 인터넷 확산, 정치적 민주화이며, 객관적 검토를 위해 경제성장이나 경제자유화, 교육, 부패 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리적 조건을 통제변수로 한다. 변수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수원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수준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정책 대안과 정치인 또는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의 유무(법의 지배),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과 정도(견제와 균형 시스템), 일상생활과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 시민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Polity IV project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Indicator) 값에 기초하였다. Polity IV project의 Democracy는 0점에서 10점으로 평가되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낮고, 10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즉, 10에 가까울수록 성숙하고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운영상에 있어 i) 정치참여가 제한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며 완전 경쟁적인 국가, ii)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iii)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에 대한 제도적 제재 장치가 마련된 국가라 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 발전의 주된 독립변인으로 고려한 인터넷 확산은 국가의 정보통신망 구축, PC의 보급과 같은 인프라 측면과 실제 이용 수준으로 정의한다. 이의 측정을 위한 지표와 통계자료는 ITU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 가입률'과 '인터넷 이용률'에 기초하였고, 평균값을 활용한다.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의 하나인 IT ODA는 IT확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ODA에서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지원된 ODA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하였다. 이는 IT ODA의 절대적 금액을 사용하는 것보다 각 국가마다의 IT ODA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수집은 김수진 외(2012)와 마찬가지로 OECD 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에서 하였다.⁹⁾

셋째, 사회경제적 및 지역적 변수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것으로, Lipset(1959)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민주적이라고 하며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소득이나 부, 도시화, 산업화 등의 수준이 높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민주적 가치나 민주적 정치 규범인 관용(Tolerance)을 더욱 신장시키려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다(Kangoye, 2011: 5). 또한, 경제성장은 인터넷 확산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인프라에 대

9) OECD DAC가 제공하는 ODA 관련 통계는 5자리 코드로 분류되며, 각 CRS 코드는 DAC5(3자리 코드) 내의 한 카테고리 안에 속하게 된다. 43개의 DAC5 중 ICT 관련 원조는 220 코드에 속한다. 여기에는 분류되지 않은 항목(Unclassified, 22000), 통신 정책 및 경영 관련 분야(Communications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22010), 통신관련 분야(Telecommunications, 22020), 방송·미디어 관련 분야(Radio/television/print media, 22030), 정보통신기술 분야(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2040)가 포함된다. 이중 본 논문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22040)만을 활용한다.

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국가들만이 인터넷에 대한 국민들의 대중적 접근을 위한 확산전략을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나 기기를 구입해야 하므로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중요하다. Xiaoming, et al.(2004)도 중국이나 인도 같이 개인소득이 낮은 거대 경제체제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1인당 소득 규모가 훨씬 더 큰 소규모 경제체제들에 비해 인터넷의 대중적 접근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요인을 '1인당 GDP' 파악하며,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한다. ii) Schumpeter(1950), Lipset(1959), Hayek(1960)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이 자유로운 무역이나 자본의 흐름을 허가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소득의 증가와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민주화를 위한 변화과정이나 노력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¹¹⁾ 한편, 국제투자자들 역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보다는 개방경제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주는 국가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조화순, 2006; Perraton, et al., 2000). 그 중에서도 경제자유화는 네트워크화된 세계 경제에서 국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경민 외, 2007: 117).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화는 세계 경제의 상호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기술의 채택이 국제적인 확산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터

넷 확산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Milner, 2003: 27-28). 이에 여기서도 경제자유화 요인을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하나로 정하였고, '국가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는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의 경제자유지수 값에 기초하여 파악한다. iii) 교육수준은 민주주의 성취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Lipset, 1959; 고경민 외, 2007: 130).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Kangoye, 2011: 5, 13). 또한, 이는 인터넷 확산과 이용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다(Madon, 2000: 91-92; Norris, 2001).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컴퓨터 지식, 기술 등을 알아야 하며(Xiaoming, et al., 2004; Bazar, et al., 1997)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수원국 국민들의 초등학교 진학수준'으로 보고 World Bank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 '초등학교 진학률'을 수집한다.¹²⁾ iv) 최근 원조의 효과 연구 가운데 더욱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부패와의 관계이다. Tavares(2003: 100)는 수원국에서 원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원조가 수원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어딘가로 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부패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IT ODA에서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IT ODA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정보시스템 구

10) 국가의 부를 상징하는 1인당 GDP는 1% 증가하게 될 때 인터넷 이용률이 0.5% 증가하며, 1인당 GDP 100만 달러 당 인터넷 이용자 수는 6.5명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을 만큼(Bezemen, et al., 2004, 14) 인터넷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Xiaoming, et al., 2004).

11) Giavazzi, et al.(2005)은 1960-2000년 140개 국가 자료에 기초하여, 경제 및 정치적 자유화 정도가 정부가 기존 제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등의 구조화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Kalyvitis, et al.(2012: 4-5)는 원조가 민주화를 저해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즉, 원조의 유입으로 인해 부정부패나 지대추구 행위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데 경제자유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원조의 역효과가 오히려 줄어들고, 반대로 경제자유화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원조가 민주주의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2) 성인문맹률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누락된 수치가 많아 초등학교 진학률 통계로 대체하였다.

측과 운영, 정보공개 범위의 확장,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부정보에의 접근 기회 제고 등 굵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겠지만,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것이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에 배분되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정치 자금으로 활용되거나 독재정부의 시민 감시와 통제강화도구 확보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IT ODA에 있어 수원국의 부패 문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부패 수준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 지수에 기초하였다. 이는 국가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¹³⁾ 10점 만점(2013년부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점에 가까울수록 심각한 수준의 부패를 의미한다. v) 끝으로 Huntington(1991: 102)이나 Rustow(1990: 80), Przeworski, et al.(1996: 43) 등은 민주화연구에서 지역이 무의미한 요인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민주화와 지역의 연관성이 일종의 모방과 학습에 의한 민주화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경민 외, 2007: 117). 본 연구에서는 비록 편의상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구분하기는 하지만, 같

은 지역에 속한 수원국들이 비교적 유사한 역사, 종교, 문화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IT ODA의 지원 규모나 인터넷 확산 수준 또한 분명한 차이를 보여 IT이전과 확산의 효과를 추정·비교하는 작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IV. 결과의 분석 및 해석

1. 개요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는 IT ODA를 수원한 117개의 국가¹⁴⁾이며 각 지표별로 수집된 자료는 2004년부터 2012년의 것이다. 실증적 분석에 앞서 분석대상 국가들이 지원받은 IT ODA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264,543백만 불이었으나 2009년에는 1,788,417백만 불로 집계되었고, 2010년 갑자기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2년 총 지원 금액이 2,917,268백만 불로 2005년대비 약 11배 증가할 만큼 큰 규모를 보였다.¹⁵⁾ 또한, 전 분야의 ODA에서 IT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표 1〉 전체 ODA대비 IT ODA 비중

연도	전체 ODA	IT ODA	IT ODA 비중
2004	640,299,032	1,384,435	0.29
2005	675,395,000	264,543	0.08
2006	804,619,451	1,066,920	0.27
2007	808,869,765	2,452,407	0.43
2008	840,172,442	1,642,657	0.47
2009	781,371,667	1,788,417	0.30
2010	859,618,391	1,240,284	0.58
2011	969,592,692	2,295,576	0.45
2012	869,145,714	2,917,268	2.69

출처: OECD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구성

13) 사실 국가의 부패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 역시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 지수로 국가의 일반적인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부패의 규모나 강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이상환, 2006: 116). 그럼에도 불구하고 TI의 부패 지수가 국가의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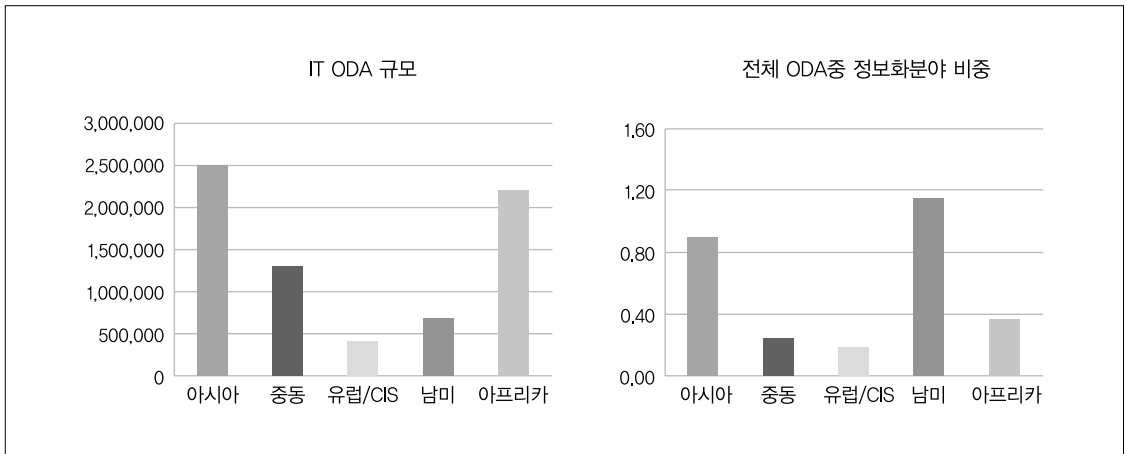
14) 아시아 23개국, 중동 9개국, 유럽 / CIS 12개국, 남아메리카 27개국, 아프리카 46개국이다.

다. 구체적으로 2005년 0.08%이었던 IT ODA 비중은 2006년에는 0.27%, 2007년 0.43%, 2010년에는 0.58%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는 2004년에 비해 무려 9배로 늘어난 2.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지역별로 IT ODA 규모와 전체 ODA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그림 3〉과 〈그림 4〉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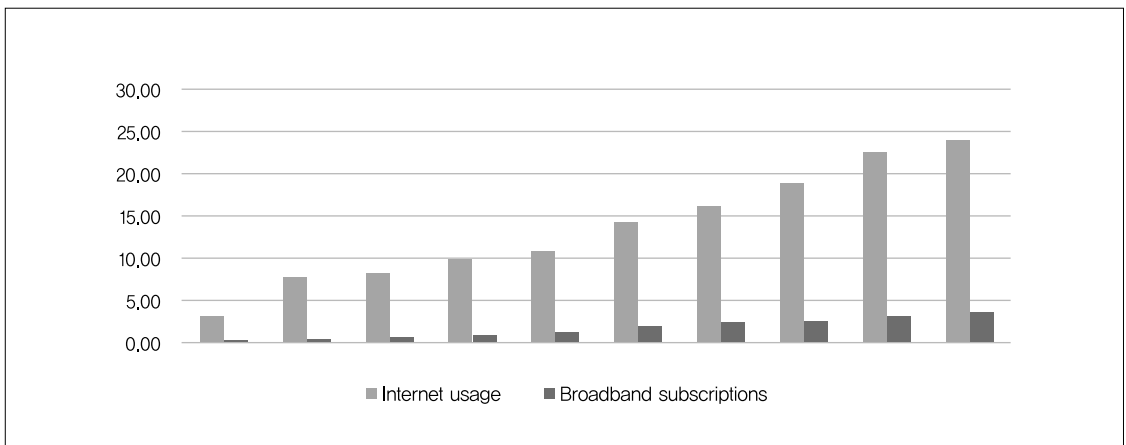
보는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원조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유럽/CIS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ODA에서 IT ODA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아메리카였고, 유럽/CIS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 대상 수원국 국민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수준은 2003년에는 0.02%로 매우 미미하였지



출처: OECD의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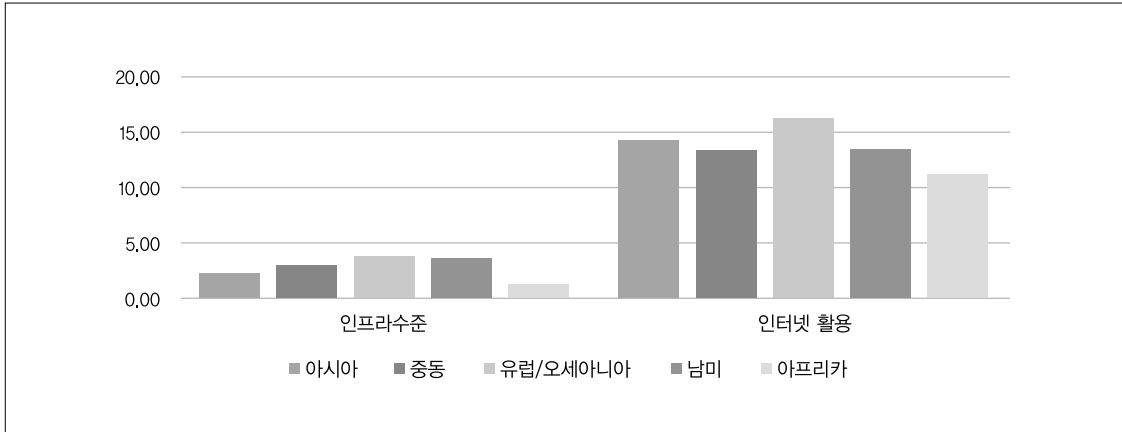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IT ODA의 규모 및 전체 ODA 대비 정보화비중



출처: ITU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구성

〈그림 3〉 인터넷 확산 수준

15) 갑작스런 감소를 보이는 것은 장비 보급, 네트워크 설비 등과 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하드웨어적 지원이 많았으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축되면서 인터넷 확산을 위한 필요 금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시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전 정보화단계와 달리 시민들의 IT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급, 교육·훈련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출처: ITU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구성

〈그림 4〉 지역별 인터넷 확산 수준

만, 2007년 1.11%, 2010년 2.49%, 2012년 3.58%로 계속적으로 높아졌다. 인터넷의 이용 수준 또한 2003년 3.11%로 다소 떨어지기도 했지만, 2004년에는 이의 두 배를 넘는 7.7%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8.94%, 2012년에는 2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유럽/CIS국가들에서의 인터넷 확산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2. IT ODA, 인터넷 확산,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IT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논쟁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형성을 이끌어 비민주적 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주장 못지않게 이것이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분배되거나 이용되어 이들의 체제와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으로의 IT이전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는 낙관적 시각이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

다음에서는 ODA를 통해 IT를 이전받은 개발도상

국에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세 요인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앞서, 전통적으로 인터넷 확산이나 ODA,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한 계량 연구들에서 고려했던 주요 변인(예: 경제성장, 경제자유화, 교육 수준, 부패수준 등)들을 모두 포함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p < .05$ 를 기준으로 할 때 변수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인터넷 확산과 경제성장($r = .756$)'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제자유화와 부패($r = -.550$)', '부패와 경제성장($r = -.509$)', '경제자유화와 민주주의($r = .482$)', '인터넷 확산과 부패($r = -.474$)', '경제자유화와 인터넷 확산($r = .363$)', '교육과 경제성장($r = .363$)', '경제자유화와 경제성장($r = .357$)', '교육과 인터넷 확산($r = .354$)', '부패와 민주주의($r = -.335$)', '경제성장과 민주주의($r = .289$)',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r = .260$)', '교육과 부패($r = -.229$)', 'IT ODA와 인터넷 확산($r = .190$)', '교육과 민주주의($r = .141$)', 'IT ODA와 경제성장($r = .138$)', '경제자유화와 교육($r = .1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IT ODA와 민주주의($r = .071$)', 'IT ODA와 경제자유화($r = .071$)'는 $p < .1$ 에서 약하기는 하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IT ODA	인터넷 확산	경제자유화	교육	부패	경제성장	민주주의
IT ODA	r	1						
	p							
	n	676						
인터넷 확산	r	.190**	1					
	p	.000						
	n	646	646					
경제자유화	r	.071	.363**	1				
	p	.075	.000					
	n	634	609	634				
교육	r	.047	.354**	.128**	1			
	p	.320	.000	.008				
	n	443	430	429	443			
부패	r	-.012	-.474**	-.550**	-.229**	1		
	p	.756	.000	.000	.000			
	n	646	617	617	429	646		
경제성장	r	.138**	.756**	.357**	.363**	-.509**	1	
	p	.000	.000	.000	.000	.000		
	n	660	630	618	442	636	660	
민주주의	r	.071	.260**	.482**	.141**	-.335**	.289**	1
	p	.075	.000	.000	.004	.000	.000	
	n	630	606	608	423	610	614	630

** p < .01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보면, IT ODA와 인터넷 확산, 민주주의 발전 간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만큼 IT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이용률을 높여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공여국의 낙관적 기대와 가정은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수원국의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은 IT ODA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 경제성장이나 경제자유화, 교육, 부패 수준 등과 같은 국가의 경제적 환경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IT ODA와 인터넷 확산, 민주주의 발전 간 관계가 단순 선형적 관계나 아니냐로 결론짓기보다 각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또는 지역적 맥락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위에서 이들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3. 사회경제 및 지역적 요인별 IT ODA,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간 관계 분석

다음에서는 IT ODA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화 가설과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가정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i) ODA를 통한 IT이전이 수원국의 인터넷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ii) 수원국에서 인터넷의 확산이 정치적 민주화의 동인인지, iii)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관계가 사회경제적 구조나 맥락과 상

관없이 획일적이며 균질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1) IT ODA와 인터넷 확산

앞서 실시한 상관관계분석에서 IT ODA와 인터넷 확산 간에는 미미하기는 하나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IT ODA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확산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모든 사회에서 획일적이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사회경제 및 지역적 맥락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객관적 검증을 위해 Fisher Z Transformation을 실시한 결과, 경제자유화 수준($z=-3.7284$, $p=.0002$)과 경제성장 수준($z=-1.8519$, $p=.0655$)에 따라 IT ODA와 인터넷 확산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적으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

수록 양자의 상관관계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표 3〉 참조).

지역별로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북한,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동티모르, 필리핀 등이 속한 아시아($r=.322$, $p=.000$)와 가나, 가봉, 스와질랜드, 말라위 등이 속한 아프리카($r=.237$, $p=.000$)에서 IT ODA와 인터넷 확산 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두 지역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확인된 것은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IT ODA의 규모나 이것이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표 5〉는 IT ODA와 인터넷 확산 간 영향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경제성장, 경제자유화, 교육, 부패 수준, 지역 요인 등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유의수준 $p<.05$ 를

〈표 3〉 사회경제적 요인별 IT ODA와 인터넷 확산 간 상관관계 비교 분석

		낮은 그룹	높은 그룹	z	p
경제성장	r	.052	.197**	-1.8419	.0655
	p	.367	.000		
	n	304	326		
경제자유화	r	-.044	.254**	-3.7284	.0002
	p	.447	.000		
	n	299	310		
교육	r	.112	.123	-.1160	.9076
	p	.103	.070		
	n	222	217		
부패	r	.226**	.249**	-.3008	.7635
	p	.000	.000		
	n	325	292		

** $p < .01$

〈표 4〉 지역별 IT ODA와 인터넷 확산 간 상관관계 분석

	아시아	중동	유럽/CIS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r	.322**	.034	-.154	.073	.237**
p	.000	.814	.270	.381	.000
n	169	51	53	147	217

** $p < .01$

기준으로 할 때 인터넷 확산에는 IT ODA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 및 지역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성장’이 인터넷 확산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606$), 그 다음은 ‘경제자유화($\beta=.120$)’, ‘부패($\beta=-.104$, $p=.000$)’ 순이었고, IT ODA가 인터넷 확산에 가지는 영향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달리 .096으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더미변수로 처리된 지역 요인 중에서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중동($\beta=-.072$, $p=.000$)과 유럽/CIS($\beta=.118$, $p=.000$)이었다.

인터넷 확산에 미치는 IT ODA와 다른 사회경제 및 지역 요인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프라 측면에서 IT ODA는 .126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긴 하였으나 그 미미한 수준이었다. 인프라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선행요인은 ‘경제성장($\beta=.648$, $p=.000$)’이었으며, ‘경제자유화($\beta=.106$, $p=.000$)’, ‘부패($\beta=-.076$, $p=.013$)’ 또한

약하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중에서는 남아메리카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중동($\beta=-.063$, $p=.022$)과 아프리카($\beta=-.090$, $p=.004$) 지역에서는 역(-)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인터넷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IT ODA는 유의한 영향을 가지긴 하였지만 매우 약한 수준이었고($\beta=.084$, $p=.001$), ‘경제성장($\beta=.575$, $p=.000$)’이 가장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자유화($\beta=.125$, $p=.000$)’, ‘부패($\beta=-.121$, $p=.000$)’, ‘교육($\beta=.054$, $p=.050$)’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미변인으로 처리된 지역 요인 중에서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가졌고, ‘중동($\beta=-.084$, $p=.003$)’ 지역은 인프라에 대한 영향관계와 마찬가지로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면, IT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및 인터넷 이용 촉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표 5〉 IT ODA와 인터넷 확산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인터넷 확산			인프라(보급)			이용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베타			베타			베타		
(상수)		-.117	.907		.163	.870		-.043	.966
경제성장	.606	18.729	.000	.648	20.295	.000	.575	17.299	.000
경제자유화	.120	4.290	.000	.106	3.838	.000	.125	4.350	.000
교육	.044	1.637	.102	-.020	-.772	.441	.054	1.961	.050
부패	-.104	-3.341	.001	-.076	-2.482	.013	-.121	-3.779	.000
IT ODA	.096	3.850	.000	.126	5.125	.000	.084	3.299	.001
아시아	제외됨			제외됨			제외됨		
중동	-.072	-2.615	.009	-.063	-2.292	.022	-.084	-2.956	.003
유럽/CIS	.118	4.296	.000	.084	3.099	.002	.122	4.315	.000
남아메리카	.009	.264	.792	-.015	-.458	.647	.005	.162	.872
아프리카	-.050	-1.581	.114	-.090	-2.878	.004	-.055	-1.684	.093
F	111.136			115.963			101.292		
p	.000			.000			.000		
R2(Adj R2)	.600(.595)			.610(.605)			.578(.572)		

유의확률 < .05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우며 교육 수준은 높은 반면 부패위험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인터넷 확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인터넷의 대중적 확산과 더불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상했다. 그에 대한 관심은 인터넷 혁명이 한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은 물론 전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가정을 형성하였고(고경민 외, 2007: 113),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으로부터의 IT이전을 강화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선진공여국의 기대처럼 인터넷 확산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 정치적 효과는 국가의 맥락적 요인과 상관없이 획일적이거나 균질적으로 나타나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회경제 및 지역 요인에 따라 IT ODA 수원국을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의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그룹간 상관성 차이 대한 유의성 검증을 Fisher Z Transformation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IT ODA 수원국에서 분석된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관계는 수원국의 '경제적 성장'이나 '부패' 수준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표 6> 참조). 수원국이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성장을 거두거나, 부패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자의 관계에 강한 정(+)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 국가들에서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표 6> 사회경제 요인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 상관관계 비교 분석

		낮은 그룹	높은 그룹	z	p
경제성장	r	-.075	.189**	-3.2189	.0013
	p	.203	.001		
	n	290	300		
경제자유화	r	.088	.201**	-1.3932	.1636
	p	.139	.000		
	n	286	302		
교육	r	.140*	.158*	-.1850	.8532
	p	.044	.024		
	n	206	204		
부패	r	.268**	-.031	3.6778	.0002
	p	.000	.605		
	n	311	276		

* p < .05, ** p < .01

<표 7> 지역별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 상관관계 분석

	아시아	중동	유럽/CIS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r	-.002	.357*	.211	.294**	.159*
p	.979	.020	.155	.000	.018
n	163	42	47	145	221

* p < .05, ** p < .01

간 유의성은 확인되지 못했는데 이는 부패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아무리 인터넷의 보급이나 이용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여전히 정부 정보에의 접근이 어렵고,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예상케 한다.

한편 양자의 관계는 지역별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7〉 참조).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 관계에 대한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지역은 중동($r=.357$, $p=.000$), 남아메리카($r=.294$, $p=.000$), 아프리카($r=.159$, $p=.018$)이었으며 아시아와 유럽/CIS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두 요인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만을 가지고는 인터넷 확산이 수원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민주화가설과 모든 국가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가 동일하게 지지된다는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가정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경제성장, 경제자유화,

교육 및 부패 등의 사회경제적 구조 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확산($\beta=-.087$)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p<.1$ 하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나 역(-)의 관계를 보이는데다 '경제자유화($\beta=.397$)'에 비해 매우 미미한 크기여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낙관적 가정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확산 요인을 '인프라'와 '이용' 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고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인프라나 이용 모두 수원국의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선행변인이라 할 수 없었다. '인프라($\beta=.111$, $p=.059$)'는 수원국의 정치적 발전에 미미하기는 하지만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이용($\beta=-.173$, $p=.003$)'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한편, 지역 요인은 마찬가지로 유럽/CIS 지역과 남아메리카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고, '부패($\beta=-.071$, $p=.085$)' 수준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준: $p<.1$).

〈표 8〉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베타				베타		
(상수)		-1.162	.246	(상수)		-1.168	.243
경제성장	.081	1.539	.124	경제성장	.054	.970	.332
경제자유화	.397	10.693	.000	경제자유화	.396	10.674	.000
교육	-.003	-.085	.932	교육	.005	.139	.890
부패	-.067	-1.621	.105	부패	-.071	-1.725	.085
인터넷 확산	-.087	-1.731	.084	인터넷보급	.111	1.888	.059
아시아		제외됨		인터넷이용	-.173	-3.021	.003
중동	-.043	-1.166	.244	아시아			
유럽/CIS	.075	2.066	.039	중동	-.043	-1.184	.237
남아메리카	.259	6.100	.000	유럽/CIS	.077	2.129	.034
아프리카	-.015	-.368	.713	남아메리카	.262	6.170	.000
				아프리카	-.010	-.241	.810
F		33.010		F		24.239	
p		.000		p		.000	
R2(Adj R2)		.308(.299)		R ² (Adj R ²)		.271(.260)	

유의확률 < .05

V. 결론

서구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험과 시각에서 인터넷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연계시키고 양자의 관계를 일반화하고자 한다. 이들은 정보기술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정치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보고(Adelman, 2001; Bezmen, et al., 2004 등), IT이전에 힘쓰고 있다. IT ODA가 대표적으로 절대적 금액은 물론 전 분야의 ODA에서 정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ODA를 통한 IT의 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정치경제적 변화를 이끌어 국제 격차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적절한 규제의 틀을 갖추었으며 시민사회의 활동이 보장된 선진국들에서는 IT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의 경제적 중요성이나 정치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거나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Norton, 1992: 176-196; Bradshaw, et al., 2005). 중국만하더라도 인터넷이 높은 수준으로 이용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체제 위협의 경험적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통제체제까지 구축하며 인터넷 확산과 정보통제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Kalathil, et al., 2003; 고경민, 2009b: 170). 그러다 보니 인터넷 자체가 혁명적이거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고유한 정치적 논리도 갖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민주적 질서를 침식시키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 도구주의적 시각에서 논의되기 한다(Rosenau, 2000).

그러나 IT ODA사업의 실제에서는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과도하게 낙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IT ODA사업을 통한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나 충분한 근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들 수 있다. 경험적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 때문에 인터넷 확산과 통제 체제가 양립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맹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경민, 2009b: 171). 이에 본 연구는 민주화가설이 실제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 이것이 상이한 국가의 조건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통계자료와 계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논의를 하게 되었다.

첫째, ODA를 통한 선진국의 기술이전은 수원국의 인터넷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수준이 높지는 않았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는 IT ODA의 지속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보야 할 것은 IT ODA와의 상관성이 이용보다는 인프라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정보에 접근하고 정치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이 구축되고 PC등의 기기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Kalyvitis, et al.(2012)가 지적한 것처럼 IT ODA가 민주적 효과를 가지려면 인프라의 구축만으로는 어렵다. IT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IT ODA를 둘러싸고 있는 낙관적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IT ODA사업의 내용이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기술 지원 수준에서 벗어난 정치적 이용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어 선진공여국의 낙관적 기대는 지지받는 듯 했다. 그러나 회귀 분석 결과에서 수원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자유화’였고, 인터넷 확산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목해 본다면 기술결정론적 민주화가설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확산이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 부(-)의 영향을 가지는 것은 수원국에서 인터넷 이용 수준이 개인의 편의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현 정권의 유지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부패네트워크의 공고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IT를 중립적인 기술로 보면서 그 영향으로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상호 독립적이거나 대립적인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도구주의 관점에 가까워 보인다.

셋째, 수원국에 있어 인터넷 발전의 정치적 효과는 경제성장 정도나 경제적 자유화, 부패 수준, 그리고 지역적 특성 등의 사회경제적 구조나 맥락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인터넷 확산은 수원국의 경제적 성장 수준이 높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패의 심각성은 낮을수록 민주주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강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중동이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의하게 확인되었지만, 아시아와 유럽/CIS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정보기술과 국가의 발전이 국가의 역사·문화·제도, 그리고 지구적 자본주의와 정보기술에 대한 국가 나름대로의 관계에 따라 서로 상당히 다른 역사적 변이를 보인다는 Castells(200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정보기술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순한 도구나 장비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조, 여러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Liebenau, et al., 1990; 고경민, 2009a: 134).

기술결정론은 오직 기술만이 사회 발전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 또는 사회구조가 기술발전이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동일한 형태로 기술을 수렴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개발도

상국의 기술 발전은 그들만의 고유한 궤적을 가질 것이고 그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Madon, 2000; 고경민 외, 2007).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의 IT이전과 확산이 서구적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수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선진공여국의 기대처럼 인터넷 확산이 수원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그 자체의 기술적 발전이나 시민들이 개인적 편의를 위한 사용을 뛰어 넘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투명한 정보의 흐름과 공유가 보장된 사회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 체제를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인터넷은 개인적 편의수단을 넘기 어렵고 시민사회 역시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제약받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경민, 2007: 188-189). 따라서 IT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수원국의 IT에 대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이용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사회경제 또는 지역적 맥락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경민, 2012: 28). Barber(2000, 2001: 8)의 지적처럼 "민주주의가 생존하고 부흥하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질과 특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시민들의 특성의 질에 달려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만으로는 민주화의 압력을 만들어 내기 어려우며,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제약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Kalathil, et al.(2003), Castells(2000), Rodan(2003), Shie(2004) 등의 비판적 견해를 지지한다. 그리고 인터넷 확산,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IT ODA의 이행에 있어 인터넷과 민주주의를 단선적 결정관계가 아닌 국가별로 상이하

고 특수한 맥락에 따라 관계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IT ODA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여에 대한 검증 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실무적 관심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맹신 때문은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몇몇 특정 국가의 사례가 아닌 거의 모든 IT ODA 수원국을 대상으로 계량 분석을 실시하여 IT ODA에 전제된 ‘민주화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계량적 자료에 의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다 보니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관계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IT ODA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하위 활동, 어느 부문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 IT ODA와 인터넷 확산,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어려웠다. 또한, 사회경제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차별적 검토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구분을 위한 기준이 좀 더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기는 하였으나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수준을 넘어 IT ODA의 성과에 대한 검증작업의 필요성과 인터넷과 국가 발전 관계에 대한 확장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강정인·하상복 (1993). “정보기술과 원격민주주의: 비판적 전망.” 『정보사회연구』: 117-135.
 강정인 (1999).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개경통·정진섭 (2012).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배

분 전략: 한국의 대아시아 국가 ODA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15(3): 81-102.
 고경민 (2007). “국제적 압력, 시민사회의 역동성,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1(2): 185-205.
 고경민 (2009a). “정보기술과 발전, 그리고 북한 정보기술 개발지원.” 『통일정책연구』, 18(2): 125-152.
 고경민 (2009b).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 모델? 중국과 베트남의 인터넷 확산과 정보통제.” 『한국정치학회보』, 43(2): 169-191.
 고경민 (2012). “정보기술과 민주화의 패러독스?: 미국의 정보기술 수출통제정책 변화와 중국의 인터넷 발전.” 『평화학연구』, 13(3): 25-49.
 고경민·김순임·홍진혁 (2010).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한국 ODA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18(2): 95-128.
 고경민·송효진 (2007).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별 비교연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3(3):113-141.
 김복희 (2002).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동기와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장지용 (2012). “ICT 분야에 대한 ODA가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7: 189-216.
 김홍주 (2013). “공적개발원조(ODA), 부패 및 그 상호작용이 국제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DA 수원국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8(3): 1-27.
 박재신·김병준 (2013). “전자정부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베트남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사업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72-290.
 박홍수·김영석 (1995). 『뉴 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산업연구원 (2011). 「ICT 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송효진 (2014). “IT ODA를 둘러싼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비판적 검토.” 『지역발전연구』, 23(2): 67-100.
 유장희 (2005). 「공적개발원조의 이상과 현실: 한국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제언, 한국의 개발원조 방향」. 국제협력 세미나 결과보고서.
 윤종선 (2013). 「ICT 분야에 대한 ODA가 중미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송효진·이선중 (2013).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단.” 「한국지역정보학회회보」, 16(2): 27-61.
- 이상환 (2006). “부패와 민주주의: 남아시아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아시아연구」, 11(2): 113-132.
- 이천우 (2011).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ODA정책.” 산업경제연구, 24(2): 777-808.
- 이희진·장승권·고경민 (2004). “외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전략,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인터넷 전략.” 「통일정책연구」, 13(1): 187-219.
- 이희진·장승권·고경민 (2007). “정보통신기술은 개발도상국 발전을 가져올까? 한국의 ICT4D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16(4): 113-14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거버넌스」.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충식 (2014). “전자정부 ODA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파라과이 행정통신망 고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3): 1-34.
- 조화순 (2006). “정보화시대의 세계무역질서.” 「한국정치학회보」, 40(5): 366-385.
- 최고은 (2010).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참여에 대한 기술철학적 접근: 사회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세억 (2008). “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와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2(4): 205-228.
- 홍성욱·이장규 (2006). 「공학기술과 사회- 21세기 엔지니어를 위한 기술사회론 입문」. 지호.
- Adelman, I. (2001). “Fallacies in Development Theory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in G. M. Meier and J. E. Stiglitz (eds.), *Frontiers of Development Economics: The Future in Perspective*, 103-134.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zar, B. & G. Boalch. (1997). “A Preliminary Model of Internet Diffusion within Developing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AUSWEB97 Conference*, Southern Cross University, Gold Coast, Australia; at: ausweb.scu.edu.au/proceedings/boalch/paper.html(검색일: 2014.08.28.).
- Bradshaw, York W. Kathleen M. Fallon & Jocelyn Viterna. (2005). “Wiring the World: Access to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in Poor Countrie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3.
- Barber, Benjamin R. (2000/2001). “Which Technology For Which Democracy? Which Democracy For Which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6(Winter), 1-8.
- Brutigam, D. & S. Knack. (2004). “Foreign aid, institutions, and governance in Sub-Saharan Afric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2: 255-285.
- Bezmen, T. L. & C. A. Depken, (2004).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Transfers: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Castells, M.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Oxford: Blackwell.
- Chauvet, L. & P. Guillaumont (2004). *Towards Pro-Poor Policies: Aid, Institutions and Globalization. Also Policy, Economic Vulnerability and Political Instability*. World Bank-Oxford University Press.
- Chauvet, L. & P. Guillaumont (2007). “Aid, volatility and growth again: When aid volatility matters and when it does not.”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3(1): 452-463.
- Collier, P. & B. Goderis. (2007). *Does aid mitigate external shocks?*. WPS 2007-18: CSAE.
- Collier, P. & J. Dehn. (2001). *Aid, shocks and grow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688. Washington DC: World Bank.
- Crawford, G. (1997). “Foreign Aid and Political Conditionality: Issues of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Democratization*, 4(3): 69-108.
- Djankov, S., J. G. Montavlo, & M. Reynal-Querol. (2006). “Does Foreign Aid Help?” *Cato Journal*, 26: 1-28.
- Dunning, T. (2004). “Conditioning the effects of

- aid: Cold War politics, donor credibility, and democracy in Af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 409-423.
- Easterly, W. (2003). "Can Foreign Aid Buy Growth?"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3): 23-48.
- Finkel, S. E., A. Pérez-Liñán, & M. A. Seligson. (2007). "The Effects of U. S. Foreign Assistance on Democracy Building, 1990-2003." *World Politics*, 59: 404-439.
- Giavazzi, F. & G. Tabellini. (2005).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 1297-1330.
- Goldsmith, A. (2001). "Foreign aid and statehood in Af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1): 123-48.
- Gompert, D. C. (1999). "Right Makes Might: Freedom and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In Zalmay Khalilzad, John P. White, Andrew W. Marshall, eds. *Strategic Appraisal: The Changing Role of Information in Warfare*, 45-73. Santa Monica, Calif.: RAND.
- Harris, Roger W. (200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Poverty Alleviation*. Kuala Lumpur, Malaysia: UNDP-APDIP.
- Hayek, F.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eks, R. (2005). "ICTs and the MDGs: On the Wrong Track?" *i4d (informatics for development)*, February.
- Huntington, S.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djikain, R. & D. S. Siegel. (2005). "The Impact of Investment in IT on Economic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3(5): 681-700.
- Ishiyama, J., K. Sanders, & B. Marijke. (2008). "Foreign Aid and Democratization in Post-conflict Societies." *Midsouth Political Science Review*, 2007-2008(9): 19-34.
- Kalathil, S. & T. C. Boas. (2003).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Kalyvitis, S. & I. Vlachaki. (2012). "When Does More Aid Imply Less Democracy? An Empirical Examin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1): 132-146.
- Kangoye, T. (2011). *Does Foreign Aid Promote Democracy?, Aid, democracy, and instability from trade*. Working Paper 2011/64. United nations university.
- Kedzie, C. R. (1997). *Communication and Democracy: Coincident Revolutions and the Emergent Dictator's Dilemma*. Santa Monica, Calif: RAND.
- Keefer, P. & S. Knack.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 207-227.
- Keohane, R. (2003). "Global Governan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Held, David, and Koenig-Archibugi, Mathias. (eds.), *Taming Globalization: Frontiers of Governance*, 130-159. Cambridge: Polity Press.
- Knack, S. (2001). "Aid dependence and the quality of governance: A cross-country empirical analysis." *Southern Economic Journal*, 68(2): 310-329.
- Knack, S. (2004). "Does foreign aid promote democra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8: 251-266.
- Liebenau, J. & J. Backhouse. (1990). *Understanding Information: An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 Lipset, S. M.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 Madon, S. (2000). "The Internet and Socio-

- economic Development: Exploring the Interaction.”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13(2): 85-101.
- Milner, H. V. (2003). “The Global Spread of the Internet: The Role of International Diffusion Pressures in Technology Adoption.”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Interdependence, Diffusion, and Sovereignty*, Yale University, May 2002 and the second conference at UCLA, March 7-9: 1-44.
- Moyo, D. (2009) *Dead Aid*. London: Penguin.
-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on, S. W. (1992). “Transaction Costs, Telecommunications and the Microeconomics of Macro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1(1): 176-196.
- Perraton, J., D. Goldblatt, D. Held, & A. McGrew. (2000). “Economic Activity in a Globalizing World.” In David Held and Anthony McGrew, eds.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287-300. Cambridge, UK: Polity Press.
- Przeworski, A. & F. Limongi. (1993).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3): 51-69.
- Rodan, G. (2003). “Embracing Electronic Media but Suppressing Civil Society: Authoritarian Consolidation in Singapore.” *The Pacific Review*, 16(4): 503-524.
- Riddell, R. C. (2007).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nfeldt, D. (1992). “Cyberocracy is Coming.” *The Information Society*, 8(4): 243-296.
- Rosenau, J. (2000). “The Information Revolution: Both Powerful and Neutral.” In Thomas E. Copeland(ed.),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National Security*, 9-29.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Rustow, D. A. (1990). “Democracy: A Global Revolution?” *Foreign Affairs*, 69(4): 75-91.
- Schumpeter, J.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Torchbooks
- Shie, T. R. (2004). “The Tangled Web: Doest the Internet Offer Promise or Peril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August 2004)*: 13-40.
- Shultz, G. P. (1985). “New Realities and New Ways of Thinking.” *Foreign Affairs*, 63(4): 705-721.
- Singh, J. P. (1999). *Leapfrogging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elecommunications Restructuring*. New Yor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avares, J. (2003). “Does foreign aid corrupt?” *Economics Letters*, 79(1): 99-106.
- UNDP. (2001).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Development*. Essentials. Evaluation Office, UNDP.
- Wade, R. H. (2002). “Bridging the Digital Divide: New Route to Development or New Form of Dependency?” *Gobal Governance*, 8: 443-466.
- Xiaoming, H. & C. S. Kay. (2004). “Factors Affecting Internet Development: An Asian Survey.” *First Monday*, 9(2).

■ 기타(통계자료)

- 1인당 GDP, 초등학교 진학률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 IT ODA 통계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경제자유화 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 The Wall Street Journal
- 인터넷 확산: 초고속통신망가입률 및 인터넷 이용률
<http://www.itu.int/>
- 부패인식지수
www.transparency.org/
- 민주주의 성숙도 Polity project
www.systemicpeace.org